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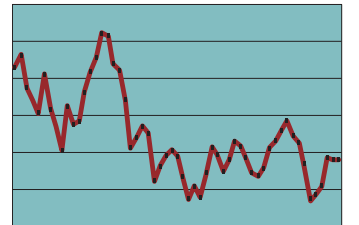
친미·우파·차떼기당의 새 주인 이명박



알렉스 캘리니코스

- 궁지에 몰린
부시의 이란 압박

4면



정성진 교수가 말하는
국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3면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②

- 남북 경제공동체와 NLL 논란

5~7면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7, 12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반전 운동

4, 12면



집중호우와 폭염 ...
기후 변화의 위험과 대안

8면

존 몰리뉴 칼럼

-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9면

www.counterfire.or.kr

새롭게 개편된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다함께'의 투표 방침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8월 20일부터 시작됐다. '다함께'는 투표에 참가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 중 한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는 '상대적 자유 투표'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의 내용을 설명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관련기사 5면



인용해도 될까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는 위험지대다.
... 아프가니스탄이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 ‘빨발 속 개싸움’ [속에] ... 한나라당 필승론이 밀고 선 모든 토대가 허물어진 것”
- 〈조선일보〉 주필 강천석의 좌절

“사실 위증교사, 내가 가서 했거든 ... 나 거짓말 잘해. 아주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니까. ... 그것만 밝혀졌어도 MB(이명박) 날라가”
- 최근 공개된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이명박 지구당 사무국장 권영옥 발언 녹취록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회수된다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경제 부총리 권오규

“아프간 정부와 나토군들이 우리를 탈레반에게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자식뿐 아니라 손자까지도 탈레반에게 보낼 생각”
- 나토군의 폭격으로 자식을 잃은 한 아프가니스탄 남성

“2000년 의료계 파업 및 금융노조 파업 사태 당시 관련자들이 잠적, 체포가 곤란할 경우 주변인물들에 대한 도청을 통해 관련자 소재지 첩보를 대공수사국에 넘기면 대공수사국이 경찰관을 대동해 검거에 조력했다.”
- 〈조선일보〉가 공개한 검찰의 2005년 불법 도청 수사기록 중

“뉴코아에서 민주노총을 항의 방문해 집회까지 열었는데 우리가 수천, 수만이 모여서 흠에버로 진격한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 앞에서 저렇게 설칠 수 있을까?”
- 8월 18일 울산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당 울산시당 김광식 위원장



지난해 11월 ‘일심회’ 간첩단 조작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
- 공안당국과 우익은 간첩 색출 소동으로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이끌려 시도했다

‘일심회’ 항소심 판결

노무현의 ‘대북 접촉’은 무죄, 진보활동가 ‘대북 접촉’은 유죄?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심해진 공안당국과 우익들의 간첩 색출 마녀사냥이 허위·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전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 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무죄 판결했고, ‘화교 출신 간첩’이 라던 정수평 씨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법원은 1심과 달리 검찰이 제시한 문건 가운데 상당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진강, 이정훈 씨는 ‘간첩죄’를 벗었다. 또, 법원은 1심에서처럼 이적단체 구성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행 3~7년에 이르는 가혹한 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성격이 정치·사상 탄압법임을 잘 보여 준다. 사실, 남한 지배자들이 북한과 접촉했다는 것을 빌미로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선적인 이중잣대다. 올 10월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해 “반국가단체 수괴”와 “회합·통신”하려 하는데 말이다. 한편, 최기영 씨는 간암 판정을 받아 치료가 급한데도, 법원은 병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조폭 재벌’ 김승연은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들뜬 분위기에서 나온 이번 재판 결과는 남북 관계 발전이 자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냉전 악법’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체제 단속법인 반민주 악법인 이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운동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다.

한규한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일시 : 9월 15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의 대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 위원회에서 가입자 비중을 과반수 미만으로 줄이고 위원회 관할을 국무총리실로 옮긴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으려 한다.

현재 10퍼센트 남짓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을 삭감해 몸뚱이를 불린 연기금을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체 구상인 듯하다.

그래서 현재 운용위원회에 포함된 가입자단체 중 소수파인 민주노총·참여연대 같은 단체의 대표들이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참에 떼어 버리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낳은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불과 열흘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7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 버렸고, 영국 연기금은 이번 사태로 2백70억 파운드(50조 원)를 날렸다.

이런 식이면 우리 노후를 위한 연금 재정을 삼시간에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개편 계획과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좌절돼야 한다.

장호중

새로나온 소책자



종파주의/초좌파주의/중간주의/아나키즘/신디칼리즘
잘못된 운동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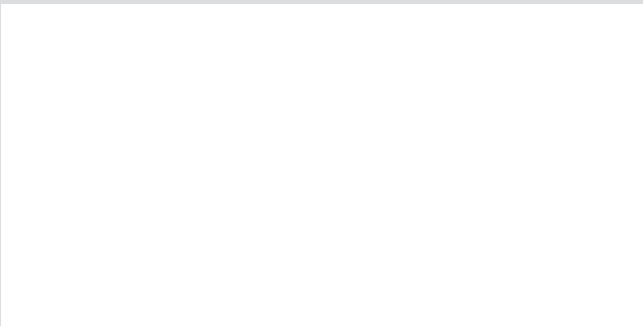
던컨 핼러스 외 지음
최일봉 옮김

가격 : 2,000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뺏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적 실수”라고 발뺌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발견된 김에 그냥 먹어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뼈까지 전면 개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

기’라는 별 볼일 없는 수입 조건조차 더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 비

강동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편집자 주] 정성진 교수는 많은 경제 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발 세계 신용 경색이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약간 축약 편집한 것인데 전문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신용경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투입으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준은 지난주 금요일(8월 17일) 재할인율을 6.25퍼센트에서 5.75퍼센트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증시와 유럽 증시는 급반등하며 전날까지의 급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으며, 어제(8월 20일) 우리 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폭등했다.

그러자 많은 경제 평론가들은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발(發) 세계 신용위기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 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미국 실물경제의 위기나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낙관론의 근거로 이른바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의 견실, 21세기 들어 미국경제의 상대적 비중 저하, 이른바 세계경제와 미국 경제의 ‘분리’(decoupling) 등을 내세운다.

아울러, 이번에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신속한 개입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국가의 불황 대처 능력이 최근 들어 향상됐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세계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세기 말 이후 BRICs(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등의 부상에 따라 저하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21세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연동돼 작동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라는 매우 일국적이며 국지적 사안이 곧바로 유럽과 아시아 증시 폭락으로 확산된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거품

또, 지난 2001년 불황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은 펀더멘틀의 호전이 아니라, 군비지출 증가와 주택 가격 거품에 기초한 소비 지출 증가 덕분이었다.

펀더멘틀의 견실성 정도는 실물경제의 이윤율 추이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데, 최근 미국 실물경제(비금융법인 부문)의 이윤율은 2004년 9.77퍼센트를 정점으로 2005년 9.68퍼센트로 저하했으며, 2006년에도 9.68퍼센트였다. 이처럼 이윤율은 저하하는데, 다우존스 지수



미국 실물경제의 이윤율 변화(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 - 2004년 이후 이윤율은 늘지 않는데 주식·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는 2004년 10,783에서 2006년 12,463으로 무려 15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또, 실러(R. Shiller)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국의 주가수익비율(P/E)은 2007년 현재 무려 27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 주가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으며, 이번 주가의 반등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임을 보여 준다.

한편 미국의 주택 가격은 1995년 이후 70퍼센트 이상 상승했지만, 작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이미 10퍼센트 가까이 저하했다. 이는 닷컴 주가 거품 붕괴로 촉발된 2001년 불황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주도해 온 주택 가격 거품도 이제 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 주택 가격 거품의 붕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세계 신용경색을 야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국과 세계 실물 경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커(D. Baker)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택 가격 거품의 붕괴는 주택 건설 수요의 위축, ‘마이너스 자산 효과’에 기인한 소비 수요 위축을 통해서 향후 미국경제의 GDP 성장률을 약 3.1~7퍼센트 저하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와 같은 미국의 소비 수요의 위축과 불황은 우리 나라와 중국처럼 대미 수출이 성장의 주요 엔진인 나라들의 수출 수요를 감소시켜, 세계적 규모에서 실물 경제 위기로 파급될 것이다.

지난주 말 연준의 재할인율 인하 이후 세계 증시가 급반등했음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 신용경색이 극복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

다. 예컨대 오는 10월경까지 약 1천억 달러 상당의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 즉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세기 말 이후 금융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MBS(모기지담보부 증권), CDO(부채담보부 증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사모펀드·투자은행 등 거대한 투기적 국제 금융 자본이 준동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증대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윤율 저하

무엇보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단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이윤율 저하의 위기, 지급불능의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긴급 유동성 공급은 임시변통책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거품을 더 부풀려서, 위기의 뿌리를 더 키울 뿐이다.

오늘날 거시경제 변동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데서 자본주의 국가가 얼마나 무능한지는 연준 의장 버냉키가 이번 사태가 나기 불과 두 달 전에도 “서브프라임 시장의 불통이 다른 경제 부문 혹은 금융체제로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일단 불황이 터지면, 자본을 구제하거나 구조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고통을 민중에 떠넘기는 데는 매우 유능하다.

이번에 연준이 긴급자금 방출, 혹은 재할인율 인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대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로 인해 주택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와 이들의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그 1백 배가 넘는 액수의 각종 고수익 파생금융상품들(MBS, CDO, ABCP 등)을 발행·거래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었다.

연준은 이번 재할인율 인하 조치에서 은행들이 MBS를 담보로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조작해 냈고 이번 위기에서 휴지조각으로 될 운명에 처한 가공자본을 실제 유동성으로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기인한 이윤율 저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세기말 이후 화폐와 주택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화가 야기한 주가 거품과 주택 가격 거품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등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은 이와 같은 금융 거품을 주기적으로 팽창시키고 또 폭발시키면서, 세계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를 빨아들여, 이제는 말 그대로 ‘금융 괴물’이 됐다.

따라서 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이행기 요구에는 구조조정 반대, 해고 반대와 같은 생존권 요구와 함께, 화폐와 주택의 탈상품화와 ‘금융 괴물’의 해체 요구도 포함돼야 한다.

정성진 교수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로,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등의 저서가 있다. 또,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의 역자이기도 하다.

부시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조지 부시 정부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목조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지난주 발표로 드러났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 군인들은 이란 정권 곳곳에 포진한 채 상당한 경제적 이권에도 관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선 매키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많은 ‘전투 현장’의 다양한 전선에서 이란의 행동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공격하는 조직들을 무장시키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란의 행태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비난은 아니다. 올해 초 부시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하는 훨씬 정교한 급조폭발물이 이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대(對)테러 담당 부서 관리는 혁명수비대 산하 특수부대인 쿠드스가 “연합군을 살해하는” 시아파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공격적] 언사들이 더 강화됐을까? 부통령 딕 체니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촉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경한 경제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를 국외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킨 데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부시 정부의 매파를 잠시 달래는 것이다. 둘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해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직면한 근본 문제는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에서 이란 정권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타도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가 제거됐다.

딜레마

더욱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의 일부 시아파 정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어야 했다. 그들은 나름의 이유로 [미 점령군에] 협력할 용의가 있었다. 그들은 이란 정부와 긴밀

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이라는 ‘지니’[램프의 거인]를 다시 병에 가두려 애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라크 스터디 그룹’은 미국이 이란과 그 동맹국 시리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예컨대, 미국과 이란 외교관들은 이 달 초 바그다드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대체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았다. 7월 말 라이스는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3백억 달러를 제공하는 군사 지원 협정 체결과 이집트에 1백3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군사 협정 체결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도 2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각종 무기 공급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거래들이] 중동을 안정시키고 이란의 부상을 억제하기를 바란다.”

특정 지역에 무기를 공급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어쨌든 현재 이란은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운동 헤즈볼라는 지난해 33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퇴시켜 큰 갑채를 받았다. 이란은 더 먼 곳에서도 동맹 세력을 발견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지난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 — 나토에 대항하려고 러시아와 중국이 결성했다 — 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심지어 부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톨마니 하미드 카르자이조차 이란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부시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이란은 협력자이자 해결사였다”고 말했다.

이란의 영향력 강화 때문에 부시와 그 참모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이란 정부와 타협하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을 파괴해야 한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힘이 약해진 미국 국방부는 후세인 정보보다 훨씬 큰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란 정부를 꺾을 만한 힘이 없다.

그러나 레임덕이 돼 허덕대는 부시와 체니가 최후의 필사적 도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전 운동은 이런 위험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쓴소리

반전 운동은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반전 운동은 신속하게 사태에 개입해 꾸준히 행동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전 운동은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참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맞서는 운동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 일각에는 피랍 사태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독자적으로 벌이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그런 사례다.

물론 이 캠페인은 피랍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이들 또한 피랍자들

의 안전한 귀환을 염원하며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다.

반전 운동 역시 피랍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바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반전 운동이 무사귀환만을 말해야 할까?

‘노란 리본 달기’에 참가한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지금, 이념적·종교적·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피랍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이 정치적 성격을 버리는 순간, 그 운동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은 부시와 노무현 정부의 점령과 파병 정책을 비판하지만,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하면서도 부시와 노무현에게 점령 종식과 즉각 철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이 부시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 교환 수용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탈레반에게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와 우파의 책략에 무력해진다. 피랍 사건의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 점령과 파병 정책을 비판하는 칼날도 무뎈진다. 나아가 이것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강화해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치적 고려”

더구나 부시와 노무현 정부는 모두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 사태에 대처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공조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할 때까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부시는 이번 피랍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사태의 본질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시와 노무현의 시도를 막으려면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점령과 파병이라는 현 사태의 “정치적” 뿌리를 분명히 강조하고 그 결론으로서 점령 종식과 한국군 철군을 힘

주어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랍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점령군의 일부인 한국군 즉각 철군이 아닌가. 또, 현 상황을 초래한 원흉인 미국 정부가 피랍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탈레반 포로 교환 수용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반전 운동 내에서는 현재 피랍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이 너무 집착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입장은 흔히 정치색이 짙지 않은 소규모 퍼포먼스 같은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대중 집회와 동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론 반전 운동이 다양한 방식을 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중 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전 운동이 탄생했다. 이런 대중 행동은 전쟁 동맹의 위기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중 하나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철군이라는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중 행동이 핵심 수단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반전 운동이 정치적 초점을 분명히 하며 대중 행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김용욱

진흙탕 속에서 승리한 ‘시한폭탄’ 이명박

1년여 간 계속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명박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이번 경선은 <조선일보>도 인정한 “진흙밭 개싸움”이자 추악한 아귀다툼이었다.

검증 청문회는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미봉하는 설거지형 행사”(〈한겨레〉)로 치러졌다. 정책 경쟁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부패·비리에 대한 저질 폭로 경쟁만 있었다. <조선일보>도 “[경선] 기간이 모두 지난 지금 유권자들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 후보 하면 ‘땅’, 박 후보 하면 ‘최목사’ 뿐”이라고 한탄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둘 다 절대 대통령이 되선 안 되는 부패·비리범이라는 것이 ‘검증’됐다.

친미·수구·차떼기 정당의 후보답게 박근혜는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이명박은 5·18을 “광주사태”라고 했다. 둘 다 정형군이 마련한 기만적인 대북 정책조차 반대했다.

이 때문에 경선 과정 내내 이명박과 박근혜의 지지율은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사람은 ‘오몰 투성이’ 속을 나뒹굴며 “자기를 손으로 ‘한나라당 필승론’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조선일보>)

경선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경선 전부터 ‘살생부’ 얘기가 오갔던 양 진영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몽상일 것이다.

굵직한 비리 의혹만 14건이라는 이명박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후보’라 할 만하다. 이것이 경선에서 석패한 박근혜의 ‘이명박 흔들기’와 맞물린다면 견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명박의 ‘상처뿐인 승리’

더 집탕이 된 ‘도로 열우당’

이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순전히 ‘대안 부재’ 때문이다.

6개월 동안 4번의 집단 탈당, 10번이 넘는 개별 탈당, 3번의 창당 등 어지러운 ‘당 세탁’을 통해 등장한 범여권의 ‘도로 열우당’이 대안으로 보일 리는 없는 것이

다. 기존 열우당 의원 143명에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민주당 출신 5명, 시민사회세력 일부가 가세해 결성한 통합민주신당은 ‘잡탕’ 성격만 강화했다. 정대화 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 스스로 고백하듯, 시민사회세력의 ‘수혈’도 “모양내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들러리감”이 돼 버렸다. 그래서 창당 직후 통합민주신당 지지율(7.8퍼센트)은 일주일 전 열우당

지지율(9.0퍼센트)보다도 더 떨어졌다.(〈한겨레〉)

정동영, 천정배 등 손학규의 합류를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짜퉁 한나라당 후보”라며 손학규를 비난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범여권 자체가 사사건건 한나라당과 개악 공조를 하며 ‘짜퉁 한나라당’ 구실을 충실히 해오지 않았던가? 한미FTA 예산론자이자 “광주를 털고 가자”는 손학규에게 “시대정신”을 찾았다며 앞다퉂 즐서는 범여권 386들도 역겹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싶겠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정동영도 “과잉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앞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투쟁, 한미FTA 등 피하고 싶은 쟁점들이 첩첩산중이다.

저들이 아귀다툼과 ‘대통합 사기극’에 매달리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 농성장을 지키며 경찰력 침탈에도 함께 맞섰다.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 경쟁을 하며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주류 언론은 한나라당 아귀다툼 보도의 40분의 1 수준으로만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들을 보도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과 힘을 합쳐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굳건히 지키며, 주류 정치권의 위기가 초래한 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명훈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2007년 4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관한 건’이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재석 2백29명 중 1백46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다함께’ 소속 중앙위원을 비롯해 여러 중앙위원들이 반대와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진보연대 규약 제2장 8조와 10조에는 ‘회원단체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한국진보연대에 보고할 의무’와 ‘강령·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적 노선 차이를 존중”한다는 한국진보연대 강령의 <기본방향>에도 결맞지 않는 과한 조항임에 분명하다.

‘다함께’는 그동안 정치·조직상의 느슨함을 한국진보연대

가입 조건의 하나로 제시해 왔는데, 준비위를 거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이런 조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별 연대체에 대한 태도 면에서도 그렇다. 한국진보연대가 운동을 대표한다는 식의 태도는 사안별 연대체 운동과 이미 크고 작은 충돌을 낳고 있는 듯하다. “향후 복잡한 연대 조직을 정비”(중앙위원회 안건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결코 운동의 활력과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언급할 만한 또 하나의 쟁점은 이갑용 당원의 당내 대선예비후보 등록이 거부된 일에 관한 것이다. 4인의 중앙위원은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이갑용 당원은 울산 동구청장 시절,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파면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갑용 당원의 행위는 정의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갑용 당원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합법주의에 경도된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럼에도 이 결의문은 재석 1백97명 중 찬성 83명으로 부결됐다. 상당수 중앙위원들이 부당한 정부 탄압에 항의하는 정치적 내용보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결의문 채택을 찬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김여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관련기사 6~7면

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NLL은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게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조차 그것이 영해를 규정하는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 한 달 뒤 유엔사가 일방으로 그었다. 그것

도 북측을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전적인 남측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이었다. 이 선 위로는 제발 올라가지 말라는 것, 바로 대남용이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NLL이 그어진 뒤 북한은 이 선을 수용한 적이 없었고 늘 시비의 대상이 됐다. 마침내 남한 정부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북한과 약속했는데(남북기본합의서), 북한에 이 약속을 해 준 것은 우파들의 정권인 노태우 정부였다.

분쟁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우파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공갈 협박일 뿐이다.

김하영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공동체?

김하영

노무현은 경제협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단연 중요한 쟁점이 평화인데도, 막상 남북 정상은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것이다. 9·19나 2·13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선언 정도를 제외하면 말이다.

평화 의제는 북미 간에 협상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합의를 틀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하위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인 동시에, 북한 당국의 지론이고, 남한 정부의도 수용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왔던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핵심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없지 않으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북미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며, 최소한 남북미 3자 사이에서 협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남북이 따로 협의할 사안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따로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최근의 한반도 위기가 핵을 발미로 한 부시 정부의 대북 압박 결과이므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풀려야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더욱

이 노무현 정부는 “균형”은커녕 미국의 등 뒤에 붙어 ‘선 핵문제 해결 / 후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 설사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해도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면 말짱 소용 없다는 것이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교훈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이런 엄연한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있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을 거슬러 추진됐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클린턴 정부가 1999년 하반기부터 “포괄적 포용”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이뤄졌다).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주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노

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언급돼 있지만, 이 말은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열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을 6자회담과의 선순환 관계로 설명하려 했다. “6자회담의 진전이 남북 대화를 촉진”했다면, 이번에는 “남북 대화가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노무현의 광복절 경축사할 것이라는 얘기가였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9월 6자회담 이후로 연기돼 이런 논리마저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아예 “통일회담”으로 규정한다. 남북 회담은 평화회담이 될 수 없으므로 완전 포인트를 통일로 맞추라는 뜻이다. 하지만 “통일의 구체적 전망과 실천적

경로”가 제시되고 “민족통일기구” 구성이 합의된다 해도,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 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이 제2차 북핵 위기(2002년) 이후 그랬듯이 말이다.

동북아 허브

노무현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금융·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노무현에게 북한은 새롭게 열리는 뒤 투자처이고, 평화는 이 투자

기회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반영을 위한 조건이다. 그에게는 평화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인가 보다.

동북아시아대위원장 이수훈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화두가 중요하라며 “평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반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대놓고 북한을 돈벌이 대상이나 발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 특수”는 그 가운데 하나다.

노무현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설명했다. 동북아 허브론은 노무현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경제 구상이다.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은 북한에 여러 개의 개성공단, 여러 개의 특구를 만들고 싶어한다.

개성공단은 적은 규모이긴 해도, 이미 인건비 절감을 원하는 남한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에서 봉제업은 인건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개성은 중국보다 품질과 인건비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신원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북한이 남한(과 중국) 자본에게 “투자 기회”가 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조차(租借)를 떠올리게 하는 계약들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는 개성공업지구 2천만 평 토지 이용권을 50년 간 보장받았고, 중국은 대안유리공장을 지어주고 광산 채굴권을 50년 간 보장받았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권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북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신의주 특별법은 외교·국방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특구에 부여하고 이를 50년 동안 보장한다고 돼 있었다.

서해 교전

노무현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

이 점은 청와대 관계자의 부연 설명을 들어 보면 더 명확해진다.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고, 상대가 투자 받은 것이 있으면 북측 입장에서도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결국 손해[대.]”

이런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경제협력이 시작된 이래로 두 차례 서해 교전이 있었고,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동안 남북 모두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됐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좋은 사례다. 미국과 중국은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바로 이 기간에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노무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동맹 재편”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추진한 한미동맹 재편과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 협력한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을 뿐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를 건설하라

전지윤

8월 18일 열린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적셔 준 빗줄기와도 같았다. ‘폭염주의보’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총 1만여 명, 서울에서만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급속, 공공, 전교조, 공무원, 건설, 언론, 사무금융, IT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집회가 끝난 뒤 전국 12개 이랜드 매장에서 타격 투쟁을 전개했다.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투쟁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노조 조합원은 “나도 비정규직이다. 이 투쟁이 이어야 다른 비정규직들도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연대 대요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감격했다. 노동자들은 서로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매일 이랜드 매장 타격 투쟁을 벌이고 있는 ‘1천 명 선봉대’가 민주노총 간부·활동가들의 본격적 연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기층 노동자들의 본격적 연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애초 목표했던 규모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전국노동자대회는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동안 이것이 부족해서 고립된 채 패배한 투쟁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이 그랬다. 얼마 전 출소한 김영일 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을 보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수돗물과 전기마저 끊긴 컴컴한 포스코 건물 안에서 2천5백 명이 점거’를 했던 ‘1년 전 그 날 밤이 영상처럼 떠오른다’고 했다.

당시 포항건설 노동자들은 9일간 포스코를 점거하고 영웅적으로 저항했고 전국적 정세에서 ‘태풍의 핵’이 됐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검찰과 경찰, 기업주, 기성 언론들은 전국적인 힘을 모아 대처했다. 무려 1만여 명의 경찰력이 포함으로 집결했다.

반면 우리 편은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강력한 연대 투쟁의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폭력으로 투쟁을 짓밟았고 70여명을 구속했다. 그 외중에 하중근 열사도 살해당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들불처럼 번져가는 투쟁의 불길을 막으려 했다.

이제 올해 여름에 전국적 정세에서 ‘태풍의 핵’은 바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은 모든 힘을 집중해서 이 투쟁을 짓밟으려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문과 지역을 뛰어넘는 강력한 연대로 이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영일 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도 “기필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냈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길 기원”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자신이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을 선포



8월 18일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이러한 연대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였고, 강력한 점거 파업으로 연대 투쟁을 촉발시켜 냈다. 정말이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탄실히 서 있는 들불과 같은 오기가 우리를 전율시키고” 있고 “안 가면 굶고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진보정치〉 335호) 만들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부문을 뛰어넘

는 연대도 실천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1백여 명은 8월 19일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이웃이고 동지이고 한식구”라고 했다.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단결과 연대로, 전국적인 힘의 집중으로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기층으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얼마 전 공개된 홈에버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6월까지 순손실이 무려 8백억 원에 달했다. 아직 본격적 점거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말이다. 거대한 부채에 기반을 둔 무리한 인수·합병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량 해고와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성수는 예기치 못한 저항에 직면해 찢쩍대고 있다.

판돈

그러나 김경옥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이 말했듯이 박성수는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다. 판돈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영계 대표”가 된 박성수 뒤에는 노무현 정부가 버티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게 앞친 데 달친 격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친제국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인 두 사안은 노무현 정부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갔다. 따라서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은 두 사안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노무현 정부를 협공해야 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국면으로 이런 문제를 가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9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짓밟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 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참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년에 버금간다니, 북한 민중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

다. 이번 수해는 북한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식량과 약품, 생활용품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상호주의의 전력이 있는 정부가 이런 지원을 협상 결과에 관계 없이 북한 민중의 필요에 따라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북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직후에는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

해 북한을 ‘응징’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대북 결의안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사석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취하는 제재 조치보다 한국의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이 북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말하곤 했다.

노무현 정부가 쌀과 비료 같은 인도적 지원조차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기 나름의 상호주의를 버리지 않은 채 남북 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기후 변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장호중

영화에서나 보던 아열대성 집중호우가 두 주 동안 이어지더니 이번엔 때늦은 폭염이 찾아왔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인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남한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집중호우로 입은 홍수피해 때문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10월로 늦춰야 했고, 중국에서는 7월 이후에만 가뭄 ·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신기록이 8개나 쏟아졌다. 일본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한 폭염으로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일사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방글라데시 중북부 지역에 10일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체 64개 주 가운데 38개 주가 침수돼 1백60명이 죽고 1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만 1천 명이 넘는 설사 환자가 발생했고 도로 · 댐 ·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이 유실돼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가위기사태를 선포했다.

인도에서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히말라야 산악 지대의 눈이 녹아내려 홍수가 일어났다. 동북부에서만 1천여 명이 사망했고 1천 4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구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달 동안 모든 대륙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뉴욕에는 토네이도 폭풍이 찾아왔고, 홍수로 지하철이 침수되고, 폭염 때문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아프리카 수단에 폭우가 쏟아져 나일강이 범람하는가 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폭설이 내렸다. 영국에서는 홍수로 9 명이 죽었고 남동 유럽에서도 최고 기온 경신 소식이 이어졌다.

선진국 정부들의 무능

몇 년 전과 달리 이제 세계의 모든 언론과 정부 기관들이 입을 모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고 말한다. 화석연료(석유 · 석탄 · 가스 등)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점점 높이고 있고, 그 결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폭우와 대형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와 바로 다음 세대가 죽기 전에 인류의 멸종, 혹은 최소한 인류 문명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지난 16일에는 일본 국영 연구기관들이 북극해의 빙하가 1978년 위성 관찰이 시작된 이래 가장 작은 크기인 5백31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9월 중순에는 4백50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 전망인데, 이것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5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치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의 태도는 기후 변화만큼이

지난 한 달 동안 남아시아에서만 홍수로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나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제 이들은 진심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멈추고 싶어한다. 1백50년 전 유럽 대도시에 번진 티푸스나 콜레라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자본가들의 생명도 위협하자 전염병 퇴치에 나섰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 기후 변화가 제기할 위협은 그 이상이다. 목숨만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를 멈추려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요 대기업들의 이윤이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이들 사이의 경쟁적 자본 축적 경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체제의 위기를 낳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난 G8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대기업주들은 기후 변화를 멈춘다는 목표를 스스로 성취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IPCC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5백 90ppm을 넘으면 앞으로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확률이 90퍼센트나 된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기후 변화 대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영국 정부의 목표치조차 이를 훨씬 초과하는 6백66ppm이다. 과학자들은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지구의 기후가 인류가 살아온 지난 수백만 년의 기후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약(교토협약)은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 기금 같은 시장 대안의 도입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부실 협약이 돼 버렸다. 한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국가들이지만 둘다 교토협약의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다. 무엇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은 아예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개인적 해결책의 한계

이런 무책임한 선진국 정부들에 대한 불신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의 때문에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긴다. 우리 모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기초한 ‘개인적 해결책’들은 실제로는 작동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마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대며 움직이는 몇 톤 짜리 쇠덩이를 끌고 출근해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지만,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이 설계돼 있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집이 없고 새로 살 능력도 없다.

결국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에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땅에 침을 뱉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조지 몽비오 같은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들 —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 정부에 훨씬 큰 책임이 있고,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는 수억 명의 빈민들이 아니라 화석연료 경제에서 이익을 독차지한 소수의 대기업주들에게 책임이 있다.

기후 변화의 효과로 일어나는 투쟁들

사실 환경파괴는 사람들의 의식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농업의 모든 진보는 노동자를 약탈하는 방식상의 진보일 뿐 아니라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상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모든 진보는 생산력의 항구적 원전을 파괴하는 진보다. 한 나라가 대공업을 토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예컨대 미국처럼, 이러한 토지의 파괴 과정은 그만큼 더 급속하다” 하고 지적했다.

맑스가 살던 시대에 비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훨씬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했고 그 결과 단지 토지뿐 아니라 대기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기후 변화를 멈추려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어떤 투쟁도 처음부터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듯이 기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투쟁도 재해나 생활수준 하락에 항의하는 투쟁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생생한 사례를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참사 때 정부의 재해대책과 인종차별에 항의한 흑인들의 시위에서 목격한 바 있다. 최근 세계 식량 값 폭등(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와 기상 이변 때문에 발생)에 항의한 멕시코 민중들의 시위도 이런 경우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확실한 것만큼이나 앞으로 이런 투쟁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하다. ‘아끼고 절약하자’는 구호는 이런 투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되레 투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후 변화나 그 효과 때문에 더욱 격렬해진 수많은 투쟁들에 직접 참가해 이 모든 투쟁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파괴를 낳은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시 정부의 인종 차별적인 재해 대책에 항의하는 카트리나 피해 생존자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20세기에 노동계급이 겪은 최악의 패배인 히틀러와 나찌의 집권은 20세기에 인류가 겪은 최악의 재앙인 제2차세계대전, 그리고 인류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홀로코스트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연관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나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찌 운동의 성격은 무엇인가? 나찌는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가? 나찌를 저지할 수는 없었는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짧은 칼럼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나는 나찌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의 요점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그것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더 충분한 답변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시기인 1929~33년에 레온 트로츠키가 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런 분석은 나찌즘에 대한 부르주아적 해석이나 정설 공산주의, 즉 스탈린주의적 해석과 관련지어서, 그리고 그 해석들과 대조해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신문 기사, 책,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나찌즘에 대한 부르주아적 견해는 이렇다. 나찌즘은 독일의 민족성(예컨대 권위주의·군국주의·잔인함 따위)이 표출된 것이라거나 히틀러라는 악마 같은 천재 개인의 산물 — 히틀러가 사악한 웅변술로 독일 국민 전체를 호렷다는 것이다 — 이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상호모순적인 이 두 견해는 사회 세력이나 경제와의 연관, 특히 자본주의 체제와의 연관을 완전히 외면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웅변술

그러나 단순하고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이 부르주아적 견해가 모두 틀렸음을 보여 준다. 첫째, 독일의 나찌즘은 국제 파시스트 운동의 일부였다. 파시스트 운동은 단지 독일에서 시작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온건한’ 나라라는 영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했고 (물론 강력함의 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집권과 함께 시작됐다.

둘째, 히틀러와 그의 나찌당은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과 함께 시작된 국제 경제 위기 이후에야 독일에서 진정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히틀러의 이른바 강력한 웅변술도 독일 국민에게 거의 효과가 없었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은 모

두 파시즘이 제1차세계대전 뒤에 자본주의 체제를 사로잡은 국제적 위기의 산물이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았다. 파시즘은 의회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반동적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노동계급을 분쇄함으로써 그런 위기를 자본에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트로츠키는 이런 일반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는 파시즘이 단지 자본가 계급 전체 또는 심지어 일부 대기업들이 추진한 정책이나 정치 경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파시즘은 하층 중간계급, 즉 뽀띠부르주아지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시작됐다.

이 계급은 경제 위기 때 심각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고통을 겪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위로부터 은행과 거대 독점기업들에게 짓밟히고, 다른 한편으로 아래로부터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계급의 압력에 시달린다. 경제 위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양대 계급 사이에 끼여 괴롭다고 느낀 뽀띠부르주아지는 “광포해져서” 파시스트의 데마고기에 넘어가는 비옥한 토양이 됐다.

이런 계급 기반이야말로 파시스트와 나찌의 이데올로기 — 유대인 혐오를 비롯한 — 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한편으로, 파시스트와 나찌는 ‘반(反)자본주의적’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아

니라 국제 자본이나 금융 자본을 비난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산주의·사회주의·노동조합에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 두 요소를 결합시키면, 적어도 파시스트의 머리 속에서는 유대인 혐오가 떠오르게 된다. 즉, 금융 자본과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의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어쨌든, 로스차일드와 맑스는 모두 유대인이 아니냐는 식으로). 결국, 국가·민족·지도자·인종이 계급을 초월하는 신화적 존재로 격상된다.

노동자 공동전선

뽀띠부르주아지라는 기반은 또, 파시즘이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파시즘이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은다 해도 파시즘 자체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층 중간계급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집권하려면 1932년 가을 독일에서 그랬듯이 대자본가들에 의해 “끌어올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극단적인 압력을 받아야만, 그리고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더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과 파시스트들을 이용해 노동계급 조직들을 분쇄하는 모험이 성공할 것

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위험한 외부 세력에게 국가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넘겨주는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시스트들도 거리에서 노동자 조직들을 공격하는 실천적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지배계급의 후원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뽀띠부르주아지라는 기반 때문에 파시즘은 대자본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덕분에 지배계급은 ‘보통의’ 경찰이나 군사 독재로는 얻기 힘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작업장·지역사회·거리에서 경찰이나 군대의 단순한 외부 개입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노동자 조직들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층 수준에서 활동하는 파시즘의 대중적 간부층 덕분이다.

트로츠키가 그의 탁월한 저작 《독일의 반파시즘 투쟁》[발췌 국역: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 풀무질]에서 자세히 발전시킨 이와 같은 분석은 파시즘의 본질을 잘 포착했을 뿐 아니라 파시즘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보여 주었다.

첫째, 파시즘은 모든 노동자 조직들에게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맞서 노동계급을 최대한 단결시킬 수 있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건설해야 한다.(1929~33년에 스탈린주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곧 사회(주의) 파시스트라는 초좌파적 개념 때문에 그런 단결을 파괴했다.)

둘째, 사회주의적 좌파가 자신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만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뽀띠부르주아지를 노동계급 편으로 끌어당기거나 적어도 중립을 지키게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에서 입증한다는 것을 뜻했다.(또다시 나중에 스탈린주의는 ‘진보적 부르주아지’와 동맹하는 민중전선 정책을 통해 그런 능력을 억눌렀다.)

이런 교훈들이 오늘날에도 현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체제의 위기는 비록 1930년대만큼 첨예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파시즘의 위협도 민족성이나 지도자 개인들과 무관하게 여전히 존재한다. 파시즘의 위협이 아직 눈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도, 노동계급의 강력하고 단결된 행동으로 그 위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파시즘의 위협을 영원히 제거하려면,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이]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Never Again)는 구호가 영원한 현실이 되도록 만들려면, 파시즘을 키우는 토양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1938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찌 집회
- 파시즘은 다른 독재 체제와 달리 중간계급 대중운동에 기반한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연대의 힘으로 저항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재(송파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편집자 주] 구청의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임정재 동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선 투쟁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투쟁에서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등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 구청은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공노조 등은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저는 송파구청 민원봉사와 전화안내실에서 2002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근무해오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시다. 어떻게든 계약을 연장해 보려고 계약이 만료된 7월 2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는데, 근무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이 동원됐지요. 인간적 모욕과 멸시를 주고, 사무집기를 모두 밖으로 빼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 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의자만 가져다 놓고 앉아 근무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문을 모두 떼어 버렸고, 시끄러워 전화 받기 힘든 상황이 돼 버리자 아예 전화선을 옮겨 민원봉사와 과장님 옆으로 이동 배치시켰습시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저와 함께 근무해오던 동료들을 이용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출근투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지요. 저로서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필사의 각오로 정의와 진실 앞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굳게 다졌습시다.

힘과 권력을 믿고 법을 그르친 적 없다며 완강히 버티던 구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 임정재 동지

돼 가는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잘못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한번 두 번 다른 집회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시대적 흐름들을 파악하게 됐습시다.

희망의 빛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면서 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함을 느꼈습시다. 이것이 나의 일로구나!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님의 “비정규직은 나의 세대에서 끝나야 된다”는 말에 공감과 감동을 받았고, KTX 단식투쟁 현장에 가서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시다.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하면서 비참한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꼈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솟구쳤습시다. 소박하게 진실되게 가정에 충실하

면서 집회가 무엇인지, 저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됐어요.

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세력들을 만나고,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강자에 맞서 저항해 나가는 이들을 접하게 됐습시다. 그러면서 힘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잘못 시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습시다. 힘없는 사람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서로 모아 힘있는 자들의 수보다 많게 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순을 수정·보완해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시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올바르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진 자와 부족한 자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멋진 사회를 꿈꾸며, 연대의 힘을 이루어 희망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대항해 나가렵시다.

지역 사회포럼

서울 남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일시: 8월 22일(수) 오후 8시

연사: 김하영(주간 <맛불> 편집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장소: 방배1동 사무소(2호선 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부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일시: 8월 23일(목) 오후 8시

연사: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교육센터(한성대입구

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부산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일시: 8월 24일(금) 오후 8시

연사: 한규한(주간 <맛불> 기자)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대학 맑스주의 포럼

고려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김하영(주간 <맛불> 편집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일시: 8월 23일(목) 오후 4시

문의: 016-9353-5619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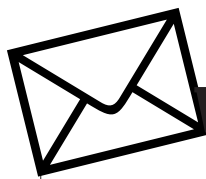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에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묵비에 대해 한마디

저는 이랜드·뉴코아 2차 점거 파업에서 연행됐을 때 완전 묵비를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묵비는 저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할 경우 스스로 곤혹감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묵비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항의 표시입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법률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와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기개를 상징합니다.

형량을 낮춰볼 요량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포함해) 선택적으로 진술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떠올려본다면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힌 이상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난 법정에서 판사와 방청객들을 상대로 말할 것이고 모두(최후)진술문으로 바깥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하고 마음먹고 입 꼭 다물고 앉아 있는 게 일관되고 확실하며 오히려 속편합니다.

박중호

지지 먼저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

지난 호 신문에서 최영준 동지의 편지를 읽었다. 그가 8월 11일 민주노총 5차 총력투쟁이 벌어진 뉴코아 강남점 집회에서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를 호소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한 것도 옳았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최영준 동지의 주장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강남점 집회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이고 민주노총의 호소에 응해 여성연맹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점, 이석형 위원장이 ‘1천 명 선봉대’ 출범·8월 18일 전국노동자대회·8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 등 일련의

투쟁 계획을 발표한 점을 심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먼저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러한 계획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며, 모든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계획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지 표현 없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을 향해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연대 파업을 요구하고 주장한 것은 자칫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대립시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대한 지지가 바탕이 됐다면 연대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최영준 동지의 강조는 나무랄 데가 없었을 것이다.

김재현

단속·추방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돈도 못 받게 만든다

‘불법’ 신분을 이용해 돈 떼먹는 사장

며칠 전 내가 일하는 복지센터에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심(가명)이 찾아왔다. 그는 3년 동안 일한 공장에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사장님이 바쁘다고 하면 휴일도 안 쉬고, 명절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월급도 더 안 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공장엔 냄새가 많이 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작은 약통을 보여 줬다. 두통

약이었다. 이 약을 6개월째 매일 먹으면서 일한다고 했다.

그런데 와심이 공장을 뛰쳐나온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니었다. 사장 아내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것이다.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 주머니에 있었던 50만 원이 사장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고 했다. 이를 증명할 길도 없고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서 속앓이를 하다가 그냥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20일 정도 일한 임금이라도 받을 수

없겠냐고 했다.

나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자 사장은 와심이 “‘불법’[체류 재인] 걸 아냐. 오기만 하면 출입국에 신고해 버릴 테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그 놈 집을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후 와심은 임금도 받지 못했고, 도망치듯 이사했다. 노무현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전현정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서평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대학원생들 중 기독교 신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은 진보적 견해들을 지지하면서 종교와 진보적 사상을 혼합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말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저도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한 채로 대화는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마침 종교를 비판한 신간이 나왔길래 도킨스가 어떤 학자인지 궁금했는데 최일봉 동지의 서평을 읽고 나니 뭔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종교 자체를 비판하려는 도킨스의 견해를 계몽주의의 최신 버전으로 소개하고,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과 종교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는 맑스의 견해를 구분하는 최일봉 동지의 통찰력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해 큰 도움을 얻습니다. 제가 읽은 서평 중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원

코스콤비정규지부는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 황영수입니다. 기사 내용에 수정이 필요해서 글을 보냅니다. 코스콤과의 1차투쟁(6박7일간 파업)에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합의서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불〉의 이랜드 관련 기사에서는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은 점거 파업에 들어갔고 곧 승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투쟁은 승리한 게 아니라 2차 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2차 파업 투쟁도 많이 알려 주십시오. 많은 관심 가져주

사측이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뒤통수를 쳐서 2차 투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코스콤 동지들이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는 단호한 투쟁으로 1차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노조 인정 자체가 큰 성과이고, 승리가 낳은 자신감으로 코스콤 동지들 1백여 명

서서 감사합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
황영수

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이겠죠. 투쟁을 평가할 때 요구안의 쟁취뿐 아니라 정치적 성과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개의 투쟁에서 승리는 잠정적이며 적들은 매번 뒤통수를 칩니다. 2차 투쟁에서도 1차 승리를 기반으로 한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윤



짧은 투쟁 소식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다

지난 8월 19일 서울역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1백50명, 이랜드노조 조합원 1백여 명을 비롯한 5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전교조 교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

8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와 학생 등 1천여 명이 모여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북미간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7명의 전교조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공안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반전 활동가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규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8월 16일 정오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출석요구서 발부 규탄 및 반전평화운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관련 촛불집회를 빌미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경아 활동가와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김광일 활동가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에 항의하고 반전 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추천 영화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
서울 스폰지 하우스 23일 단관 개봉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영화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눈물과 폭압을 넘어 반드시 승리로!



홍윤경
(이랜드일본노조 사무국장/ 위원장 직무대행)

파업 60일째, 어느덧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도, 대부분이 주부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고하게 투쟁을 지속해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헌신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연대 투쟁이다.

모든 연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동지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정성어린 투쟁 기금에 조합원들은 자주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눈물은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되어 우리 자신을 버티게 해 준다. 우리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다.

월드컵점 농성 3일째 점심시간, 어제 집에 갔던 조합원들이 싸 온 도시락으로 식탁

이 풍성했다. 쑥스러워하며 내민 도시락통 뚜껑을 열어보니 콩으로 만든 “투쟁” “승리” 글자가 선명하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합원들의 염원이 담긴 도시락으로 힘이 더욱 솟았다.

농성 13일째, 2교대로 운영되던 농성장 이 봉쇄됐다. 챙겨주어야 할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면서 전화를 해도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내가 가면 더 빨리 침탈당할지도 모르는데, 동지들이 처참하게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버텼다.

공권력을 뚫고 동지들이 들어왔다. 단 한 명이라도 동지들을 교대해서 집에 보내주기 위해 전경 버스 밑을 기어서 농성장에 합류했다. 들어온 동지들을 보고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파업 37일차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행한 2차 점거투쟁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뉴코아·이랜드 동지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운명을 같이 했다. 폭력적인 구사대의 위협 앞에서 우린 의연했다. 바깥 사수대오가 천명에 달한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너무 감격해서 또 눈물이 났다.

집과 매장밖에 몰랐던 여성 노동자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웃으면서 고객을 맞이했던 착한 그들, 통통 부은 다리로 새벽 2시에 집에 가서도 집안 치우고 식구들 반찬 만들어놓고 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주부 노동자들이 찬 바닥에 박스



한 장 깔고 자면서 농성장을 지켰다.

그러나 기어이, 공권력은 이토록 절박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가냘픈 그들의 팔다리를 폭력적으로 떼어내고, 끝까지 반항하는 노동자들을 개처럼 끌고 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던 투쟁이 벌써 60일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동지들의 연대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과장·팀장들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우리들, 그렇게 순진했던 우리들이 부당 해고와 외주화에 저항하여 펼쳐 일어난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투쟁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사수해야만 합니다. 불매로, 매장 타격 투쟁 참석으로, 모금으로, 동지들의 참여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노무현 정부는 더는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탈레반의 추가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됐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탈레반의 대면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탈레반 측 협상자는 “인질과 맞교환될 탈레반 수감자의 숫자를 줄이거나 그 명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탈레반 최고지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우리는 [포

로] 석방 권한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결국 탈레반은 “한국 측이 인질 2명 석방 뒤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고”, “이렇게 협상에 미온적이라면 남은 인질 1~2명을 더 살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김장수가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를 만나 감사를 표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탈레반을 “학살자”라 부르고, 탈레반과 “타협은 없다”며 한국인의 생명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강경책도 일부 압박 효과를 [내서]” 2명이 석방됐다고 하지만, 강경책의 진짜 “효과”는 배형규·심성민 씨의 죽음이었을 뿐이다.

최근 미군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며 대규모 탈레반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점령의 비극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한국인 피랍자들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지지부진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피랍 사태가 가려지기를 바랬는지 모른다. 추가 살해 소식이 회담 개최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요행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피랍 사태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 결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모순과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각 철군은 한국 정부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랑스 기자가 납치됐을 때 프랑스 정부가 즉각 철군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자 탈레반은 포로 교환 요구와 상관없이 피랍자들을 풀어 준 바 있다(프랑스 정부는 나중에 이 약속을 어겼다).

또,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에 포로 교환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9월 초 APEC 회의에서 노무현은 부시를 만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 때까지도 포로 교환 얘기가 없다면 노무현 정부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피랍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코 평화의 사도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용욱